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VIP 리포트

■ 국내 전력수급의 구조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 원, 장후석,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02-2072-624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국내 전력수급의 구조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국내 전력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2
3. 개선 방안	9
【참고】 전국 시도별 전력자급률 현황	11
【HRI 경제 통계】	13

Executive Summary

□ 국내 전력수급의 구조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개 요

최근 동계 전력피크가 하계 전력피크보다 높게 형성됨에 따라 겨울철 전력위기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매년 여름과 겨울에 반복되는 전력위기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전력수급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근본적 해결책이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국내 전력수급의 ① 수요·공급 증가 속도의 불일치, ② 생산·소비 지역의 불균형, ③ 연료원의 다양성 부족, ④ 발전설비 구성의 편중 등 네 가지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본다.

■ 국내 전력수급의 구조적 문제점

첫째, 전력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발전설비 확충에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년 간 전력 수요는 연평균 5.3% 증가한 반면, 발전설비 용량은 같은 기간 연평균 3.7% 증가에 머물렀다. 한국의 전력소비 증가율은 OECD 34개국 중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둘째, 전력 생산시설은 남부지방에, 소비는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별 전력 자급률 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되었다. 수도권의 전력 소비량은 170TWh, 생산량은 107TWh(자급률은 62.8%)로 63TWh 이상의 전력을 타 지역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셋째, 3대 연료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총 전력 생산량의 95.5%를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등 3대 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자원의 가격 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구조이다. (OECD 평균은 77.7%, 2011년 기준)

넷째, 발전설비의 용량별, 형식별 편중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용량별로는 500MW 이상의 대용량 발전소 65기(원전 23기 포함)가 전체 발전설비의 50.3%를 차지하고 있으며, 형식별로는 기력, 복합화력, 원자력 발전설비가 84.8%를 차지하고 있다.

■ 개선 방안

첫째, 제도·기술·가격 등을 포괄적으로 점검하여 전력 다소비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건축물 등의 에너지 효율기준을 강화하고 가격을 정상화함으로써 에너지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발전소의 입지 분산을 통해 지역별 전력자급률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전력 자급률이 낮은 지역에 신규 발전설비가 우선 확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가용 발전설비 구축, 에너지 자립 마을 건설 등 분산형 전원의 확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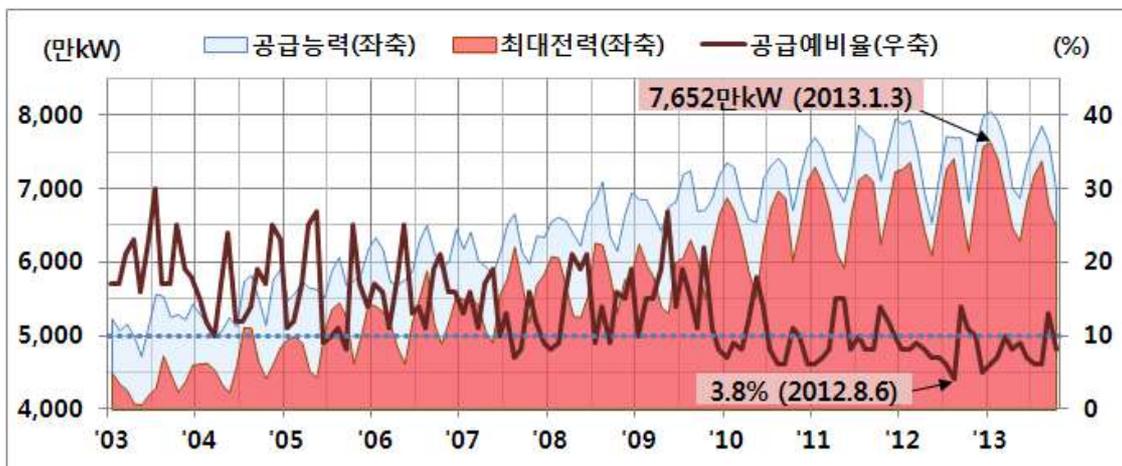
셋째, 다양한 에너지원을 개발하여 연료원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 태양광 산업 재생을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제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집단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고, 미래 에너지원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발전설비의 용량별, 형식별 편중현상을 완화해야 한다. 중·소규모 분산 자립형 발전시스템을 확충하는 한편, 열병합 발전설비의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1. 개요

- 최근 동계 전력피크가 하계 전력피크보다 높게 형성됨에 따라 겨울철 전력 위기에 대한 우려가 증가
 - 2010년 이후 전력 예비율이 10% 이하 수준으로 고착화되면서 매년 여름과 겨울에 전력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총체적 전략 수립이 시급
 - 최대전력 사용량은 지난 겨울(2013.1.3) 7,652만kW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
 - 공급예비율은 작년 여름(2012.8.6) 3.8%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
- 반복되는 전력위기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전력수급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근본적 해결책이 요구됨
 - 원전, 송전탑, 전기요금 등을 둘러싼 갈등 역시 전력의 생산·유통·소비 구조에서 발생한 문제로 근본적 접근이 필요
- 본고에서는 국내 전력수급의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근본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① 수요·공급 증가 속도의 불일치, ② 생산·소비 지역의 불균형, ③ 연료원의 다양성 부족, ④ 발전설비 구성의 편중 등 네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

< 우리나라의 최대전력 및 공급예비율 추이 >



자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주: 공급예비율 = (공급능력 - 최대전력) / 최대 전력.

2. 국내 전력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1) 수요·공급 증가 속도의 불일치

○ 전력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발전설비 확충에는 한계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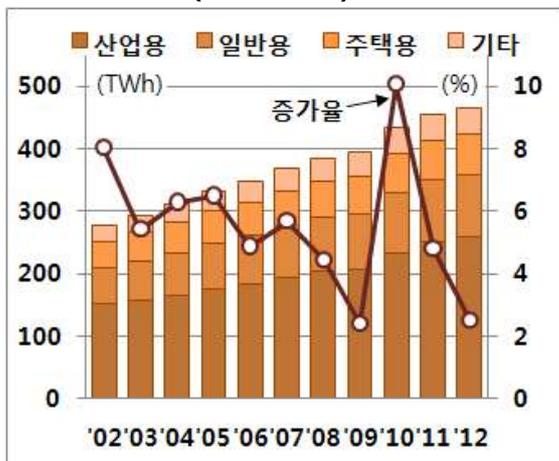
-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는 연평균 5.3% 증가

- 국내 총 전력 수요는 2002년 278TWh에서 2012년 467TWh로 연평균 5.3% 증가 (판매전력량 기준)
- 용도별 연평균 증가율은 일반용 5.9%, 산업용 5.5%, 기타(교육, 농사, 가로 등, 심야) 4.6%, 주택용 4.2% 순
- 2012년 기준 용도별 점유율은 산업용 55.3%, 일반용 21.8%, 주택용 14.0%, 기타 8.9% 순으로 나타남

- 지난 10년 간 발전설비 용량은 연평균 3.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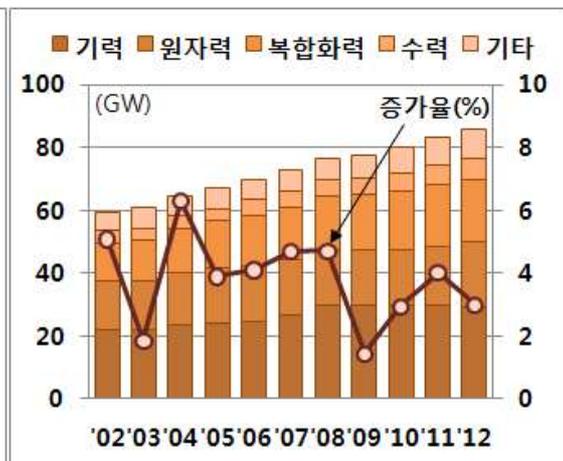
- 국내 총 발전설비는 2002년 60GW에서 2012년 86GW로 연평균 3.7% 증가 (설비용량 기준)
- 전원별 연평균 증가율은 수력 5.2%, 복합화력 5.0%, 기타(내연력, 집단, 상용자가 등) 4.4%, 기력 3.1%, 원자력 2.8% 순
- 2012년 기준 전원별 점유율은 기력 34.3%, 원자력 24.2%, 복합화력 23.1%, 수력 7.5%, 기타 10.9% 순으로 나타남

< 전력수요(판매전력량) 증가 추이 >



자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발전설비 용량 증가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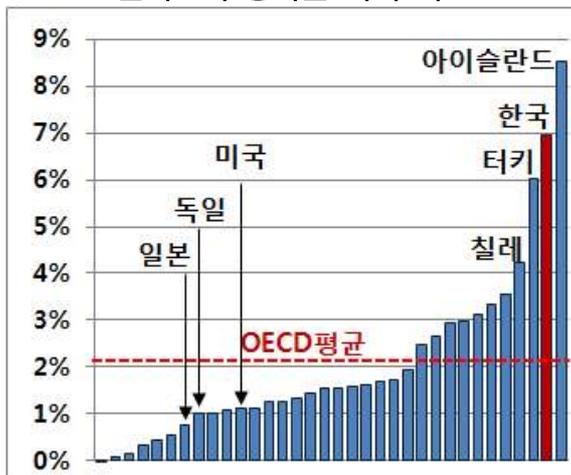


자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빠른 전기화(電氣化) 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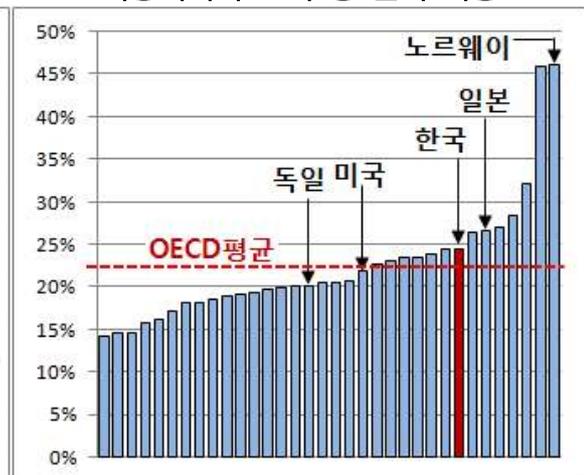
- 전력 소비량은 경제발전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 당연하나 우리나라는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
- 한국의 전력소비 증가율은 OECD 34개국 중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
 - 한국의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전력소비 증가율은 7.0%로 아이슬란드(8.5%)에 이어 2위를 기록)
 - OECD 평균 전력소비 증가율은 2.1%이며, 미국(1.1%), 독일(1.0%), 일본(0.7%) 등은 전력소비 증가율이 매우 낮음
- 2010년 기준 한국의 최종에너지 소비 중 전력 비중은 OECD 34개국 중에서 8위를 기록
 - 한국의 최종에너지 소비 중 전력 비중은 24.5%로 일본(26.5%)에 비해서는 낮지만 OECD 국가들 중 높은 편
 - OECD 평균은 22.5%이며, 미국(21.8%), 독일(20.1%) 등은 최종에너지 소비 중 전력 비중이 20%대 초반을 기록

< 전력소비 증가율 국제 비교 >



자료: IEA
주: 2000~2010년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에너지 소비 중 전력 비중 >



자료: IEA
주: 201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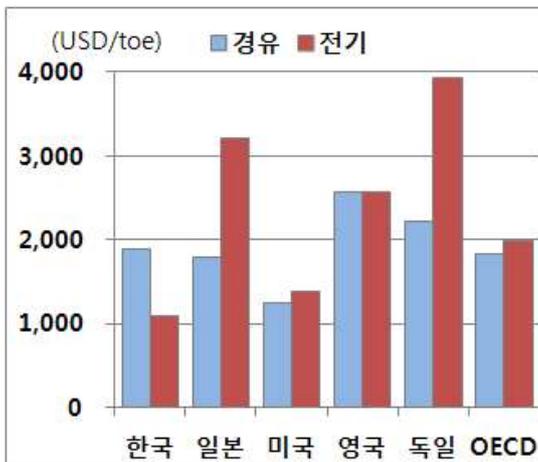
1) 전력소비 증가율의 국제비교는 IEA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통계 기준의 차이로 앞에서 살펴본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의 전력수요(전력판매량) 증가율과는 차이가 존재.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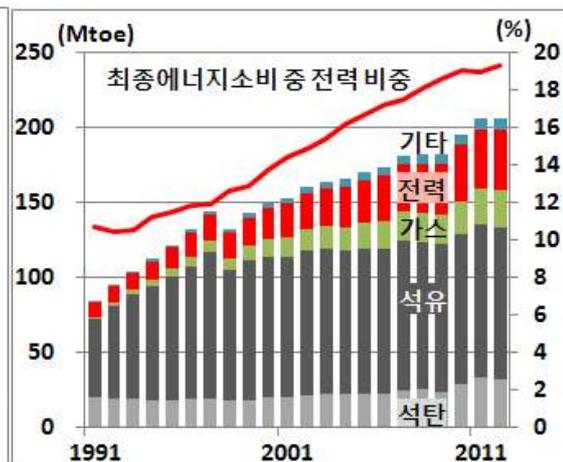
1·2차 에너지 가격의 역전

- 전력은 1차 에너지원이 변환 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2차 에너지로, 전환손실을 고려할 때 1차 에너지보다 비싼 것이 일반적
-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한 결과 2차 에너지(전기) 가격이 1차 에너지(경유) 가격보다 더 낮은 역전 현상이 발생
 - 2012년 기준 한국의 경유 가격은 1,892달러/toe인 반면 전기요금은 1,082달러/toe를 기록2)
- 1·2차 에너지 가격의 역전은 최종에너지의 전기화(電氣化)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
 -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1991년 84Mtoe에서 2012년 207Mtoe로 연평균 4.4% 증가
 - 최종에너지 중 전력 소비량은 1991년 9Mtoe에서 2012년 40Mtoe로 연평균 7.4%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력 비중은 10.7%에서 19.4%로 급상승3)

< 경유 및 전기 가격 국제비교 >



< 최종에너지 소비량 및 전기화 추이 >



자료: IEA(2013), Energy Prices and Taxes

주1) 2012년 기준

주2) 경유는 비상업 자동차용, 전기는 주택용.

자료: 통계청 자료 이용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2) toe(석유환산톤, ton of oil equivalent)는 원유 1톤의 열량(107kcal), Mtoe는 백만toe.

3) 통계청 자료 이용. 통계 기준의 차이로 앞에서 살펴본 IEA 데이터와 차이가 존재함에 유의.

(2) 생산·소비 지역의 불균형

○ 전력 생산시설은 남부지방에, 소비는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별 전력 자급률 격차가 크게 벌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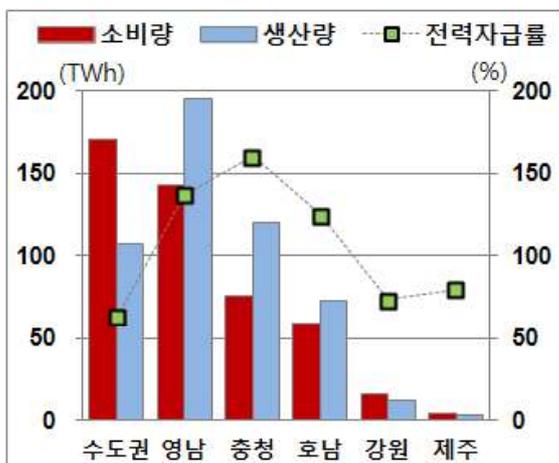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전력시스템은 지방의 대용량 발전소에서 전력을 대량생산하여 원거리 소비지역으로 송전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해왔음

- 입지가 유리한 지역에 대용량 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전력의 생산단가를 낮추고 공급량을 확대하는 데 주력
- 원거리 송전에 따르는 전력 손실을 절감하기 위해 고전압 대용량 송·변전 설비를 지속적으로 확대

- 이에 따라 수도권의 전력 소비량은 170TWh, 생산량은 107TWh, 자급률은 62.8%로 63TWh 이상의 전력을 타 지역에 의존 (2012년 기준)

- 16개 광역시도 중 전력 소비량이 최대인 경기도의 경우 전력 자급률이 28.5%에 불과하고, 서울시도 4.2%에 불과
- 반면, 인천시(337.2%), 충남(266.9%), 전남(226.3%), 경남(226.0%)은 지역 내 전력 소비량의 2~3배에 이르는 전력을 생산하여 타 지역으로 송전

< 전국 6대 권역별 전력 자급률 >



< 16개 광역시도별 전력 자급률 >

(단위: TWh, %)

구분	소비량	자급률	구분	소비량	자급률
경기	100	28.5	전북	21	36.2
서울시	47	4.2	충북	21	5.9
경북	45	156.7	부산시	21	172.7
충남	44	266.9	강원	16	72.8
경남	33	226.0	대구시	15	1.8
울산시	29	49.8	대전시	9	2.6
전남	28	226.3	광주시	8	1.7
인천시	23	337.2	제주	4	7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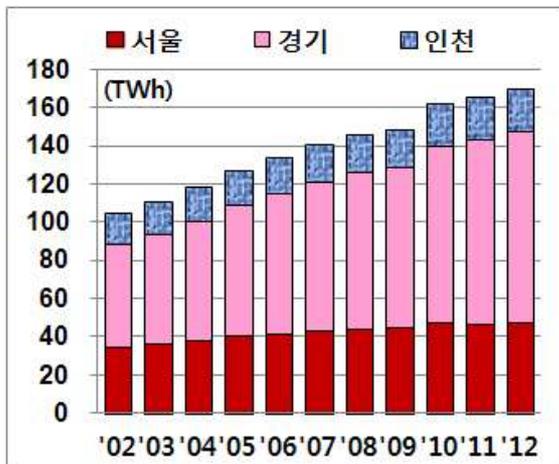
자료: 한국전력통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1) 전력자급률 = 전력생산량 ÷ 전력소비량

주2) 201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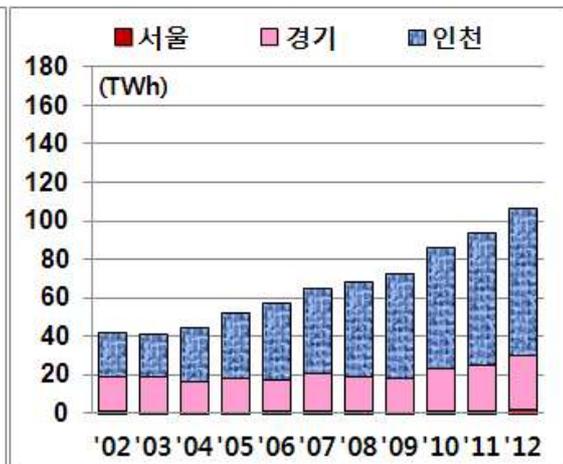
- 특히, 경기도는 전력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생산량 증가율은 낮은 수준이어서 수도권 전력 수급의 부담을 가중
 - 경기도의 전력 소비량은 '02년 54TWh에서 '12년 100TWh로 연평균 6.4% 증가한 반면, 생산량은 같은 기간 18TWh에서 29TWh로 연평균 4.6% 증가
- 과거에는 지역별 전력자급률 격차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대용량 발전소 건설 및 고압 송전설비 확충이 쉽지 않아 전력수급의 불안요인으로 작용
 - 환경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져 이제는 지방에서도 원전 및 대용량 화력발전소 등 발전설비 신설이 쉽지 않은 상황
 - 또한, 최근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에서 볼 수 있듯이 원거리 고압 송전설비 확충도 난관을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전력을 소비하는 만큼 생산에 대한 책임도 분담하는 차원에서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
 - 각 지역의 전력소비량 대비 전력생산량의 비율, 즉 지역별 전력자급률이 높아지면 발전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향상, 송·변전 설비 건설비용 절감, 자발적 에너지 절약 유도 등의 효과가 기대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워킹그룹 권고안'은 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라 부수적으로 송·변전 설비를 건설하던 기존의 방식을 송전망 제약 하에서 발전소의 입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

< 수도권 전력 소비량 추이 >



자료: 한국전력통계.

< 수도권 전력 생산량 추이 >



자료: 한국전력통계.

(3) 연료원의 다양성 부족

○ 3대 연료원에 대한 의존도가 95.5%로 매우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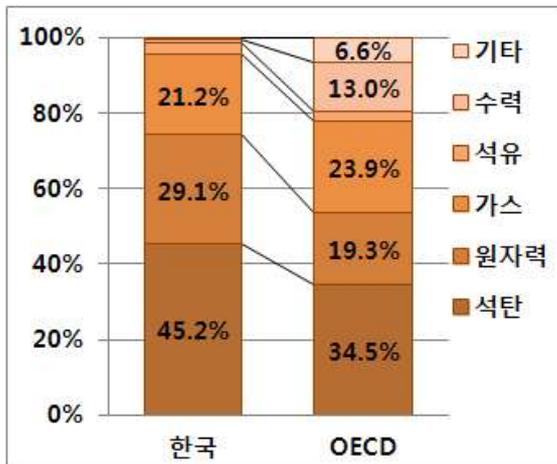
- 우리나라는 총 전력 생산량의 95.5%를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등 3대 연료에 의존 (OECD 평균은 77.7%, 2011년 기준)

- 우리나라의 연료원별 전력 생산량 비중은 석탄 45.2%, 원자력 29.1%, 천연가스 21.2%, 석유 2.9%, 수력 0.9%, 기타(신재생에너지 포함) 0.6%
- OECD 평균 연료원별 전력 생산량 비중은 석탄 34.5%, 원자력 19.1%, 천연가스 23.9%, 석유 2.8%, 수력 13.0%, 기타 6.6%
- 일부 연료에 대한 과도한 편중 현상은 에너지 자원의 가격 변동 리스크가 분산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

-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폐기물 소각 등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

- 폐기물 소각,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⁴⁾, 연료전지⁵⁾ 발전설비 등의 용량은 1,737MW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51.2%를 차지
- 그 다음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973MW(28.7%), 풍력 513MW(15.1%), 소수력⁶⁾ 170MW(5.0%)로 나타남

< 연료원별 전력 생산량 비중 >



자료: IEA,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주: 2011년 발전량 기준.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현황 >

구분	설비용량(MW)	비중
폐기물 등	1,737	51.2%
태양광	973	28.7%
풍력	513	15.1%
소수력	170	5.0%
합계	3,393	100.0%

자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주1) 2013.10.31 기준.

주2) 폐기물 등은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등을 포함

4) 바이오매스(biomass)란 폐목재, 녹조류 등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생물체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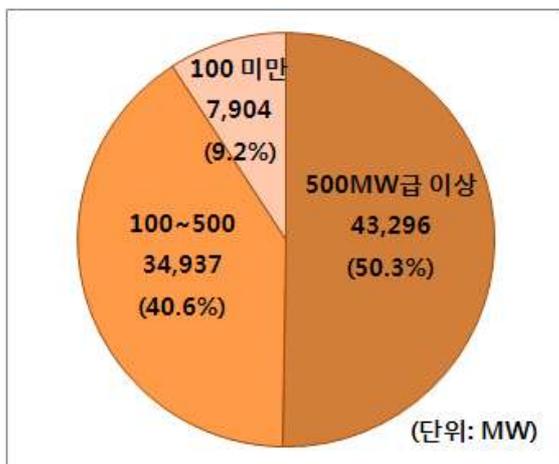
5) 연료전지 발전은 수소(연료)가 공기 중의 산소와 만나 물로 바뀌는 과정에서 전기를 생산.

6) 설비용량 10MW 이하의 수력발전 설비를 의미.

(4) 발전설비 구성의 편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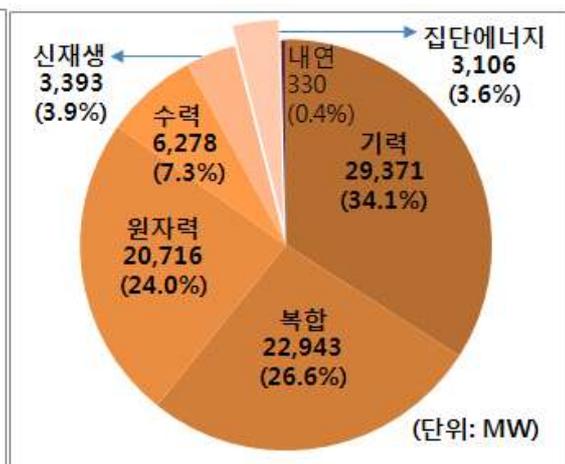
- (용량별) 500MW 이상의 대용량 발전설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100MW 미만의 소규모 발전설비의 보급이 미흡
 - 500MW 이상의 대용량 발전소 65기(원전 23기 포함)가 국내 총 발전설비 용량(86,136MW)의 50.3%를 차지
 - 100MW 이상 500MW 미만의 발전소는 199기로 설비용량의 40.6%를 점유하며, 100MW 미만의 소규모 발전설비는 5,452기로 9.2%를 차지
 - 전력 공급예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대용량 발전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경우 발전소 1기의 고장이 전력 대란으로 직결되는 문제 발생
- (형식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집단에너지(열병합발전) 설비의 비중이 3.6%로 낮은 상황
 - 국내 총 발전설비 용량 86,136MW 중에서 기력, 복합화력 및 원자력 발전설비의 용량은 73,030MW로 84.8%를 차지
 - 에너지의 소비지역과 생산지역이 가깝고 열과 전기를 동시에 사용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집단에너지(열병합발전) 설비의 용량은 3,106MW로 총 발전설비 용량의 3.6%에 불과

< 설비용량별 발전설비 현황 >



자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주: 2013.10.31 설비용량 기준.

< 발전형식별 발전설비 현황 >



자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주: 2013.10.31 설비용량 기준.

3. 개선 방안

○ 민간과 정부가 적극 협력하여 전력 수요관리 강화, 발전소 입지 분산, 연료원 및 발전설비 구성의 다양화 등을 위해 노력

첫째, 제도·기술·가격 등을 포괄적으로 점검하여 전력 다소비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건축물 등의 에너지 효율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도입에 대한 금융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 대학, 호텔,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전력 낭비를 방지를 위해 건물 용도별 적정 소비량의 초과분에 대한 누진제 도입 검토
- 전기난방시스템(EHP)⁷⁾, 전기인덕션 등 1차 에너지 대신 값비싼 2차 에너지를 열원(熱源)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사용을 억제
- 발전 원가를 전력 판매 가격에 정상적으로 반영하여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고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
- 2차 에너지(전기) 가격을 정상화하는 한편 1차 에너지(LNG, 등유)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여 전기 난방 추세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
- 원전 안전관리 강화 비용, 원전 해체 및 사용후 핵연료 처리비용, 사고 대비 비용 등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반영하여 발전 원가의 적정성을 재검토

둘째, 발전소의 입지 분산을 통해 지역별 전력자급률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 전력 자급률이 낮은 지역에 신규 발전설비가 우선 확충될 수 있도록 부지 확보 및 세제, 금융 혜택 제공

7) EHP(Electric Heat Pump, 전기냉난방시스템).

- 전력 다소비 업체의 자가용 발전설비 구축 유도, 에너지 자립 마을 건설 등 분산형 전원의 확대에 주력
- 사회적 갈등 완화를 위해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하고, 건설이 불가피한 경우 이해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

셋째, 다양한 에너지원을 개발하여 연료원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

- 도심 건물의 태양광 발전설비 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솔라맵(햇빛지도)을 적극 활용
- 태양광 산업 재생을 위해 전기요금 정상화로 확보한 재원을 활용하여 발전 차액지원제도(FIT)의 재도입을 검토
- 수소연료전지, 핵융합발전 등 미래 에너지원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넷째, 발전설비의 용량별, 형식별 편중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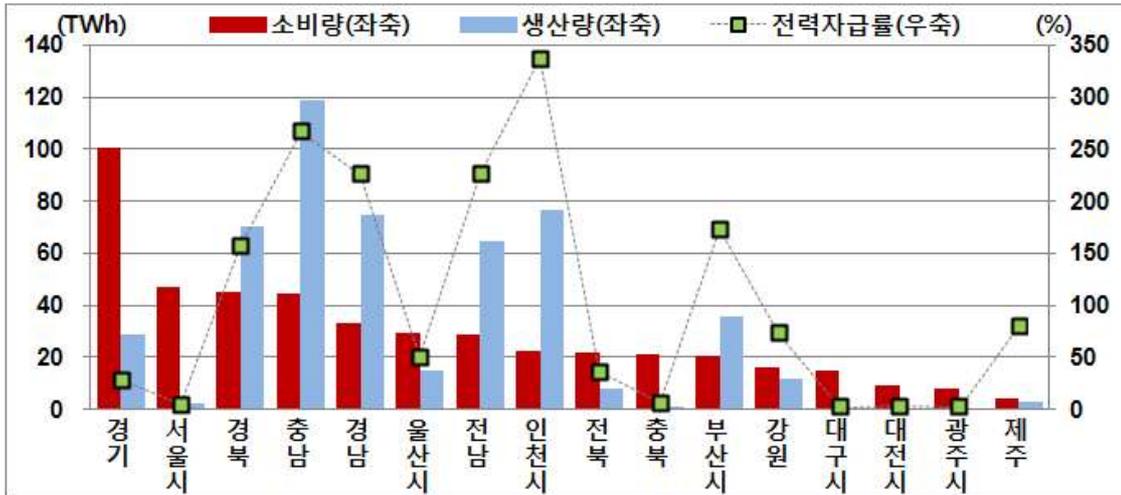
- 중·소규모의 분산 자립형 발전시스템을 확충하여 대용량 발전소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음
- 집단에너지(열병합발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심사 제도, 연료 가격, 세제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
- 규모의 경제 부족으로 수익성이 높지 않은 소규모 집단에너지 사업의 경우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이 주도하는 공공사업으로 진행 **HRI**

산업연구본부 장우석 연구위원 (jangws@hri.co.kr, 02-2072-6237)

<참고>

전국 시도별 전력 자급률 현황 (2012년 기준)

< 전국 시도별 전력 자급률 (2012년) >



자료: 한국전력통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전력자급률 = 전력생산량 ÷ 전력소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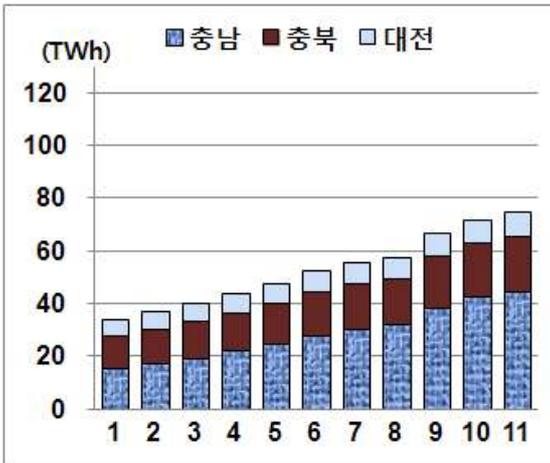
(단위: MWh, %)

순위	구분	발전량	소비량	자급률
1	인천시	76,387	22,652	337.2
2	충남	118,764	44,492	266.9
3	전남	64,462	28,485	226.3
4	경남	74,602	33,015	226.0
5	부산시	35,685	20,665	172.7
6	경북	70,202	44,800	156.7
7	제주	3,081	3,865	79.7
8	강원	11,583	15,904	72.8
9	울산시	14,609	29,363	49.8
10	전북	7,765	21,462	36.2
11	경기	28,547	100,292	28.5
12	충북	1,265	21,362	5.9
13	서울시	1,981	47,234	4.2
14	대전시	239	9,160	2.6
15	대구시	264	14,955	1.8
16	광주시	138	8,130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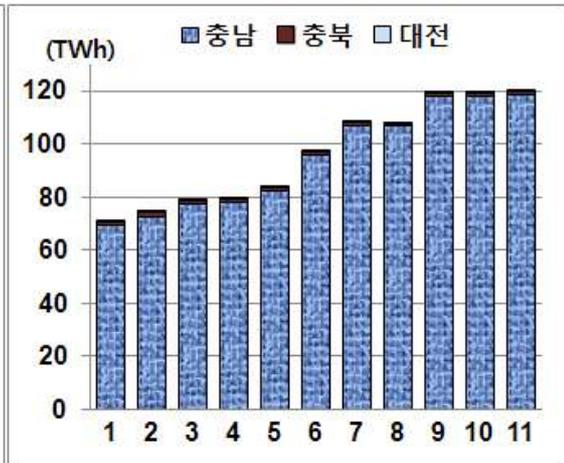
자료: 한국전력통계,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충청권 전력 소비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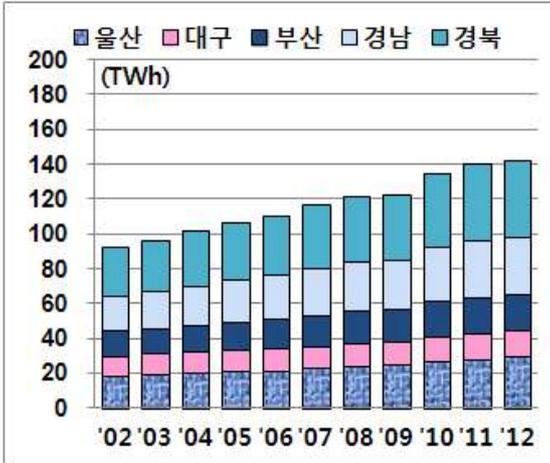
자료: 한국전력통계,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충청권 전력 생산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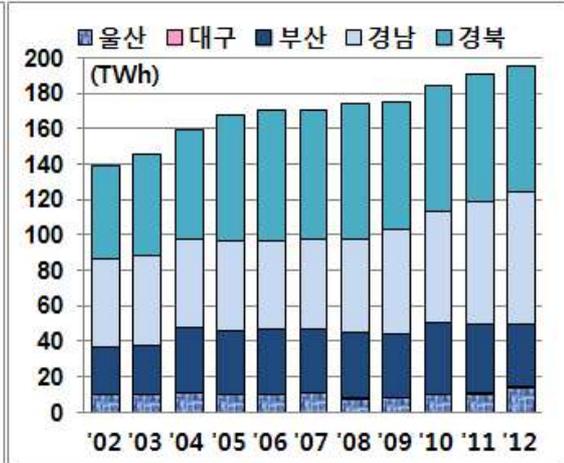
자료: 한국전력통계,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영남권 전력 소비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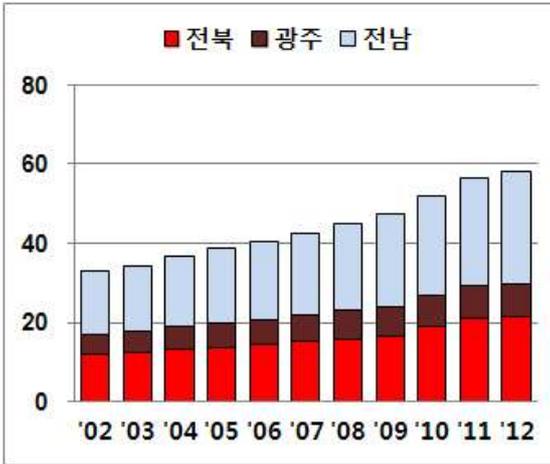
자료: 한국전력통계,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영남권 전력 생산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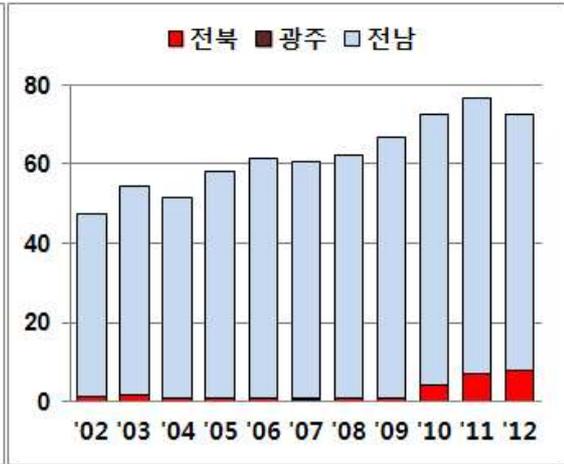
자료: 한국전력통계,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호남권 전력 소비량 추이 >



자료: 한국전력통계,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호남권 전력 생산량 추이 >



자료: 한국전력통계,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HRI 경제 통계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분	2011	2012	2013				2014		
			1/4	2/4	3/4	연간(E)	연간(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3.7	2.0	1.5	2.3	3.3	2.6	3.8	
	민간소비(%)	2.4	1.7	1.5	1.7	2.2	2.0	2.7	
	건설투자(%)	-4.7	-2.2	2.4	7.1	8.0	3.7	2.5	
	설비투자(%)	3.6	-1.9	-11.9	-5.1	1.8	-1.5	6.7	
대외거래	경상수지(억 \$)	261	431	100	198	190	620	490	
	통관기준	무역수지(억 \$)	308	283	57	143	111	468	399
		수출(억 \$)	5,552	5,479	1,353	1,412	1,370	5,648	6,123
		증감률(%)	(19.0)	(-1.3)	(0.4)	(0.8)	(2.9)	(3.1)	(8.4)
		수입(억 \$)	5,244	5,196	1,297	1,269	1,259	5,180	5,724
증감률(%)	(23.3)	(-0.9)	(-3.0)	(-2.7)	(0.2)	(-0.3)	(10.5)		
소비자물가 상승률(%)	4.0	2.2	1.4	1.1	1.2	1.4	2.4		
실업률(%)	3.4	3.2	3.6	3.1	3.0	3.3	3.1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08	1,127	1,085	1,123	1,111	1,098	1,070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